여의도 가을전쟁 시작됐다

정기국회 개회 한미FTA·북 인권법·복지예산 등 여야 혈전 첩첩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을 다룰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올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기 중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어서 정책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쟁보다 정책을 토론하는 국회, 타협문화가 꽃피는 국회를 만들자"며 "처리를 기다리는 6700여 건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안,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당의 주요 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국방개혁 관련법,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 등 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과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관철, '반값 등록금' 구현, 부자감세 철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재벌개혁, 골목상권 강화,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우선 한미 FTA 비준안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4대강 예산과 각종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예산심의도 난관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감세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의 각종 비리의혹과 특혜논란에 대한 폭로를 다짐하고 있어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집권 4년차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어 10월 11~17일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는 6~7일 이틀간 열리게 된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이날 9월 정기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은 잡지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한미 FTA 비준안 美 처리 시점 맞춰 상정

여야는 1일 미국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의회 제출 시기에 맞춰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데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같이 의견을 접근시킴에 따라 상정을 미뤘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 시점에 대해 "9월20일 전후라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이 상정해야 우리가 상정한다는 것은 주권국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을 생각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미리 상정 시점부터 약속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때는 상정을 저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서 민심탐방 활동 김정길 전 장관

"내년 총선 부산서 출마 민주당 바람 일으킬 것"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로 출마해 부산·경남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출마를 시사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주당 불모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 선전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지역구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부산에서 가장 센 후보와 맞붙어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경남 총선결과가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김두관 등과 힘을 합쳐 역할을 분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최소한 15석 이상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권에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1, 2위를 다투고 있고, 김두관 경남지사 등 새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내년 야권 대권 후보 경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야권의 다양한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후보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손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야권통합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대, 경선, 영입, 야권통합 등의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빨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한 뒤 선거에 올인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했으면서도 남북관계나 민주주의 후퇴 측면에서 방관적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권후보면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오는 5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지역민심 탐방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복지 당론' 가닥 잡나

'보편적 복지' 제기속 의원 연찬회 주목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복지 정책에 대한 당론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표가 "모든 얘기에 앞서 복지에 대한 당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시발점으로 삼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정리해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복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복지 밑그림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여연 소장은 주택, 의료와 같이 예측할 수 없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인 보육·교육·노인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전면전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친박(친박근혜)계와 소장 개혁파 사이에서도 동조 기류가 감지된다.

친박 유기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 확충은 미래를 위해 지향할 가치"라면서 "박 전 대표도 복지에 대한 방향이나 당론이 확정되면 재보선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장 개혁파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2일 양일간 의원연찬회를 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한나라 도당위원장 선출

김문일·박연하·천성복 3파전

2일 열릴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문일(담양·곡성·구례당협위원장), 박연하(전 뉴라이트 광주·전남 상임대표), 천성복(목포 당협위원장) 후보 3명이 출마한 가운데 2일 도당위원장 선거가 열린다.

기호 1번 천성복 후보는 당원의 권익과 젊은 후보론을, 기호 2번 박연화 후보는 도당의 변화와 개혁을, 기호 3번 김문일 후보는 도당의 화합과 리더십을 내걸고 대의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대표적인 '정몽준' 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 후보는 당협위원장을 오래 지낸데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로 출마해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지지세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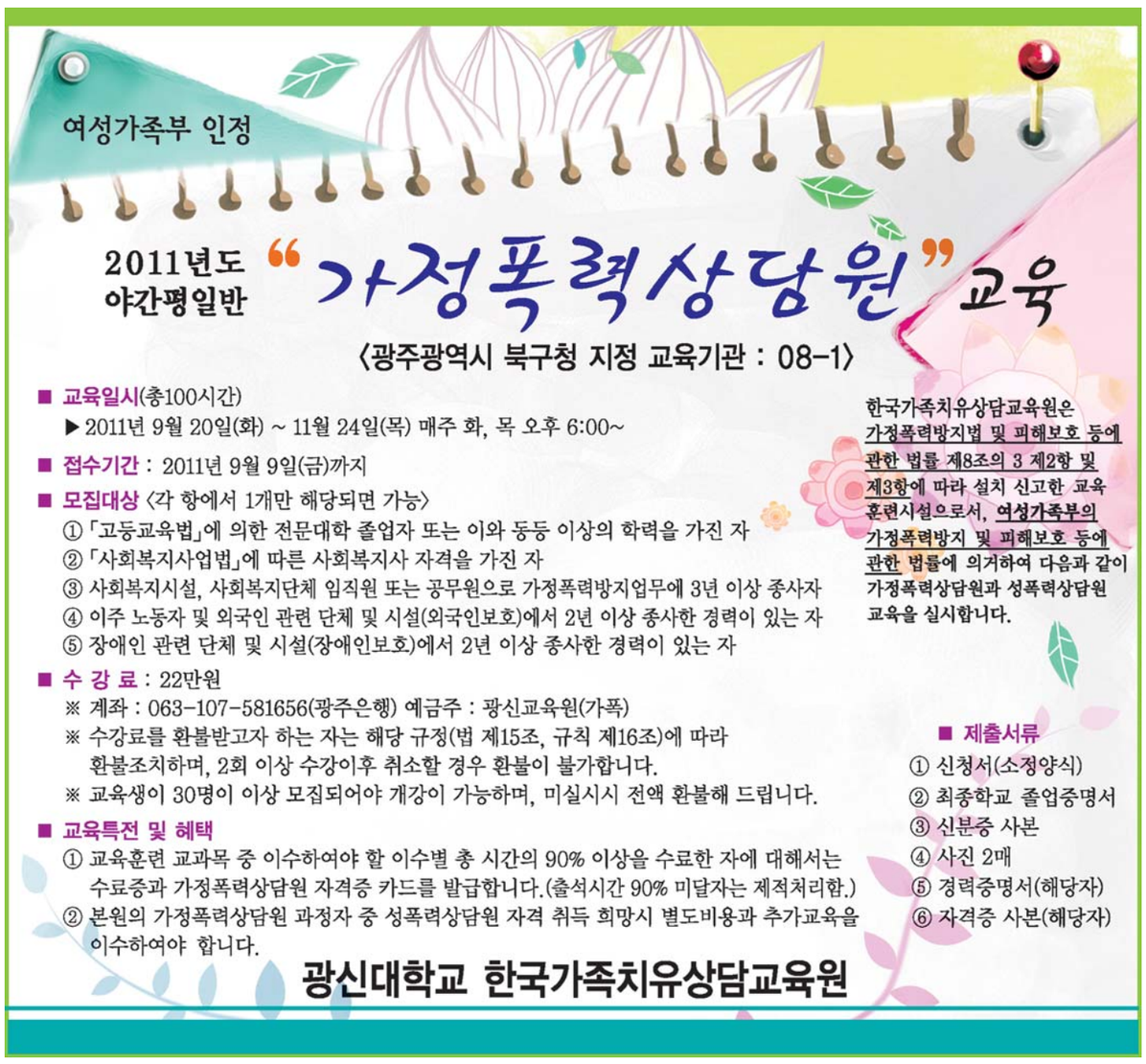
지난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의 광주·전남지역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박연하 전 뉴라이트 광주·전남 상임대표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현 당대표의 지원을 받는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 후보도 오랜 당협위원장 생활을 거친데다 박재순 전 최고위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3명의 후보가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개호 부지사 명퇴 내년 총선 출마할듯

후임에 배용태씨 유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52·사진)가 지난달 31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 19대 총선에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지사는 담양 출신으로 광주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전남도 기획관· 도지사 비서실장·관광문화국장·목포부시장·여수부시장·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등을 역임하고 2009년 7월 제35대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후임으로는 영암 출신인 배용태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장(행시 27회·전 전남도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